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방안*

곽 건 홍**

1.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2.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방향
 - 1) '민주적인 책임(accountability)'
 - 2) 거버넌스(governance)
3.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프로세스
 - 1)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의 조직과 단계적 접근
 - 2) EASTICA를 넘어서: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한 기록관리 민주화
4. 나오며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주요 논저 :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역사비평사, 2003 ; 「기록관체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국문초록]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는 역사적 과제이다. 기록공동체 또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아시아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학계의 과제를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로 설정하고, 그 필요성과 형성 방향,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다.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과정은 그 자체가 각국 내부의 기록관리 민주화 과정이기도 하다. 비공개 기록의 공개, 상호 작용을 통한 ‘민주적’ 아카이브로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과거사 청산 등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EASTICA

1.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최근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2016년 제18차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총회 유치에 성공하고, 동아시아 기록관리협의회(EASTICA)의 장국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국가기록원장은 의장직 수락 연설에서 “ICA 총회의 한국 개최를 통해 동아시아 기록관리 전통을 널리 알리고 동아시아를 세계 기록관리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만들겠다”¹⁾고 각오를 피력했다. 국제회의의 유치를 계기로 국가기록원이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기록관리를 인식하게 된 점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년 11월 7일자.

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앞서 국가기록원은 EASTICA 의장국(2000~2003년)으로 활동할 당시 매년 회의 때마다 의장이 바뀌는 진풍경을 연출하여 스스로 국제적인 신뢰도를 추락시켰던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성찰이 미흡한 가운데 ICA 총회 유치와 의장국 선정을 계기로 갑자기 동아시아 기록관리를 거론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지역주의로 한정하여 인식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에서 ‘동아시아적 시각’의 중요성은 냉전체제의 와해를 계기로 “변혁운동의 자기 전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곧 “한반도 분단 극복의 문제가 결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탈냉전 및 평화를 향한 도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²⁾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은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한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³⁾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지체시키는 요인 가운데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적대적 공존, 침략전쟁에 대한 집합기억 등은 물론이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 재생산되어온 동아시아 국가주의, 민족주의”⁴⁾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동아시아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⁵⁾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구성하는 국민국가의 밖에서 이뤄지는 국가 간 통합과정과 국가 안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

2) 임우경, 「비관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 『중국현대문학』 제40호, 2007, 6쪽.

3) 이유선,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시민사회」, 『사회와 철학』 제11호, 2006, 124쪽.

4) 이광일, 「동아시아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진보좌파의 대응」, 『문화과학』 2007년 겨울호, 183쪽.

5)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엮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7쪽.

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내부 개혁과정이 쌍방향적으로 추동⁶⁾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실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2001년 ASEN+3 정상회의에서는 ‘평화·번영·발전’을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의 비전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신태평양공동체선언’에서는 ‘민주주의’가 공유할 가치로 제시된 바 있다.⁷⁾

21세기에도 동아시아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구체화하는 민간부문의 연대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심포지움, 환경연대운동, 반전평화운동, 한중일 역사교과서 공동집필, 동아시아문화공동체포럼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⁸⁾ 또한 “정부 차원의 국제적 협력과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⁹⁾를 축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도 제시되었다. 곧 ‘경제, 역사, 인권, 환경, 노동, 시민단체 등의 분야에서 영역별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영역별 연대기구들과 국민국가가 통합적 지역연합기구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그것이다.¹⁰⁾

기록학계는 그동안 공공 기록관리 ‘혁신’에 집중해 왔다. 즉 인접 학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초반 등장한 ‘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의식을 기록학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의 사례이다. 당대 역사학의 과제를 ‘민주화

6) 백영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성찰」, 『시민과세계』 제10호, 2007, 103쪽.

7) 윤여일, 「하나의 동아시아, 불가능한 미래?」, 『프레스리안』 2012년 1월 5일자 (<http://www.pressian.com/article>).

8) 임우경, 앞의 글, 41쪽.

9)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 적응·근대 극복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 제36권 제1호, 2008, 44쪽.

10) 「탈중심의 동북아와 한국의 ‘균형자’ 역할」, 『창작과비평』 2005년 가을호 좌담, 35~36쪽 중 박명립 발언.

시대의 역사학, '통일시대의 역사학', '21세기 미래지향의 역사학'으로 정리한다면¹¹⁾, 21세기에 기록학계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또 무엇을 과제로 삼을 것인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에 주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물음에 있다.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에 주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프로세스가 '민주적인 책임(accountability)'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매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¹²⁾ 노무현 정부에서 현실화된 것처럼 한국의 기록관리 '혁신'은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기록관리 분야에서 의제화 하고 실천에 옮긴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즉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기체로서의 기록관리는 한국의 기록관리 체제에 작동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록공동체는 특히 기록관리 '혁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현실의 기록관리 체제를 변화시키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를 통한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의 실현은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21세기 동아시아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 모두 자신의 역사교과서에 담겨 있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바로 잡”¹³⁾아야 한다. 과거의 기록과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¹⁴⁾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아카이브에는 역사 문제

11) 김성보, 「탈중심의 세계사 인식과 한국근현대사 성찰」, 『역사비평』 2007년 가을호, 238쪽.

12) 백영서, 앞의 글, 44쪽 ; '민주적인 책임'은 설명책임과 같은 의미이며, 이 글에서는 accountability를 그 의미가 명확한 '민주적인 책임'으로 사용하였다.

13)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엮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7쪽.

14) 김성보, 앞의 글, 238쪽.

를 해결하는 데 단서가 되는 많은 기록이 비공개 상태로 소장되어 있다.¹⁵⁾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공유한다면 역사기록을 공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곧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민주적인 책임’을 구현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학계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셋째, 동아시아 아카이브와 기록학계 등이 민주적인 책임, 거버넌스, 더 많은 기록의 공개 등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협력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의미의 동아시아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곧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상호간의 자극과 침투를 통해 자국의 아카이브를 ‘민주적 아카이브’로 혁신하여 재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아카이브의 변화는 민간 분야의 동아시아 연대 기구를 구성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학계는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검토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3년 창립된 EASTICA는 국가 아카이브가 주도하는 가운데 형식화·의례화 된 측면이 존재한다. 총회·세미나 주제 또한 ‘전자기록 관리 전략’, ‘핵심기록 관리와 재난대비’ 등 대부분 공공기관 기록관리 중심의 실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종래의 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기록공동체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

15)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범죄재판 등의 중요 사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방위청 소장 중요 사료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라이 신이치, 김태웅 옮김, 『역사화해는 가능한가』, 미래 M&B, 2006, 325쪽).

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방향

1) '민주적인 책임'(accountability)

기록관리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록관리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수행과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국가 행정의 기본적인 분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증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인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기록관리에서 '민주적인 책임' 구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록관리 국제표준 ISO 15489는 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책임'을 구체화하는 기록관리 정책과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ISO 15489 용어 설명에 따르면 '민주적인 책임'은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가 각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술되어 있다. "기록은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거나 결정되었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은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 책임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환경은 법령·표준·규약·윤리강령 이외에도 공동체의 기대치도 포함되어 있다.¹⁶⁾ '민주적인 책임'은 또한 자율적 윤리보다는 사회적

16)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국제표준 KS X ISO 15489 해설』, 2006 참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기록관리 국제표준 ISO 15489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적인 책임’이 각국의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종래 한국의 기록관리법은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그 목적으로 했으나, 개정된 기록관리법에서는 기록관리의 목적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곧 기록관리를 바탕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에서는 ‘기록관리를 통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고 제안하였다.¹⁷⁾

‘민주적인 책임’이 기록관리법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왜곡된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겨야 했다. 곧 공적행위에 대한 정부의 ‘민주적인 책임’과 투명한 행정, 기록정보의 공개 확대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 민주주의의 발전과 기록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에는 제한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중국 당안법의 목적은 ‘사회주의 현대화’에 대한 기여가 표현되고, 기록의 관리·수집·정리·보호·이용 등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서술하고 있다. 중국에서 당안업무는 당안의 통일적 관리라는 원칙하에 당안제도 확립과 과학적 관리, 업무와 과학연구에 이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민주적인 책임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제정된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문서관리법)이 2011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전의 공문서관법·국립공문서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때와는 다른 아카이브 체계를 재형성하였다. 일본 아카이브 체계의 한계였던 기록생산 단계와 현용기록을 통제할 수

1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2005. 4.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¹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은 종래 “공문서 등을 역사자료로 보존·열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문서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공문서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기록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또한 기록은 국민이 공유하는 지적자산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이 공적 소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기록 이용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공문서관리법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동아시아 3국의 기록관리 체계는 ‘민주적인 책임’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민주적인 책임’과 관련된 구체화된 실행 프로그램이 기록관리 제도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체제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즉 그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아카이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카이브가 ‘민주적인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밀·비공개 기록의 재분류와 공개를 통해 충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록관리법은 기록의 공개 문제에서 ‘30년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또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기록관은 물론이고 아카이브에서도 비공개 기록을 5년마다 재분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에서 제안된 것은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재분류였다. 곧 기록 생산 단계, 업무 종결 단계, 기록관 이관 단계, 아카이브 이관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매 단계마다 비공개 기록을 공개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민주적인 책임’을 구체화하여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자 한 사례이다.

18) 남경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기록학연구』 제30호, 2011년 참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 전 영역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다. 공동체는 아카이브에 알권리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자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기록을 통해 ‘민주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 생산이 가능한 기록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곧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카이브의 ‘민주적인 책임’은 아카이브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포함한 보통사람들의 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지금까지 아카이브에는 그 사회를 설명하는 보통사람들의 기록이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거버넌스(governance)

‘민주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는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을 매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거버넌스는 “행위주체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제도화”¹⁹⁾를 의미한다. 유엔경제사회아시아태평양위원회(UNESAP)에서 제시한 굿 거버넌스의 요소는 “참여, 합의와 조정, 설명책임성, 투명성” 등이다.²⁰⁾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은 여러 주체들의 자율성에 기반 한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민주적인 책임’과 투명성 구현은 올바른 기록관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통해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 백영서, 앞의 글, 30쪽.

20) 조윤선, 「거버넌스 기록관리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8쪽.

‘이중적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²¹⁾ 개념은 그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동아시아 각국의 기록학계·시민사회 차원의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그 연대기구와 국가 아카이브 사이에 통합적 기구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주체 가운데 기록학계와 연구자 그룹이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아카이브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 국가 아카이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기록공동체의 구성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그 대상은 기록 학회와 연구자 그룹, 정보공개 관련 시민운동 단체,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직, 국가 아카이브를 비롯한 공공 분야의 아카이브,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아카이브 등이 될 것이다. EASTICA에도 여러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이 가입해 있지만, 그 활동은 국가 아카이브 수준의 교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아카이브 관련 조직과 연구자그룹은 대상화되고, ‘동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과정은 곧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스스로 조직하는 조직간 네트워크”²²⁾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동아시아 기록공동체로 수렴되는 방법은 네트워크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학계와 학계,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등 횡적 네트워크의 조직화와 연대는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1) 앞의 『창작과 비평』 좌담, 박명림 발언 참조.

22) 조운선, 앞의 글, 36쪽.

3.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프로세스

1)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의 조직과 단계적 접근

동아시아 기록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의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는 사회자본의 주요 형태”²³⁾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정도로 중요하다. 아직 동아시아 3국 사이에는 신뢰 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신뢰를 통한 기록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록공동체 형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먼저 국내 기록학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국내 학술대회 등의 조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부적으로 기록학 분야의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노동·인권·환경·역사 등 다양한 영역의 동아시아 연대 활동 관련 단체들과 공유하고 연대해 가는 단계이다.²⁴⁾ 이는 기록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대와 활동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들의 열악한 기록관리 현실을 개선하는 기획도 가능할 것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준비와 문제의식이 공유된다면, 중국·일본 등의 기

23)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권, 2003, 121쪽.

24) 민간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백지운,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민간연대'의 역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년 참조.

록학 연구자들과 교류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학회 등과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조직하는 단계이다.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은 조직화의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가칭 국내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단계이다. 기록학계, 기록전문가협회, 정보공개 관련 시민단체, 기록학 연구자, 민간 분야의 아카이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공동체 포럼의 조직 과정은 내부적인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 준비위원회’의 활동에는 중국·일본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사회의 영역별 기구와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 준비위원회’를 확대하여 공동 준비조직을 만드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중국·일본 등의 학계·연구자, 민간 분야의 아카이브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직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과제의 설정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을 조직하는 단계이다. 포럼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실천하는 사업 방침을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 활동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은 이와 같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등 공적 영역의 아카이브로 외연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 기록공동체의 전망을 공유하고, 일국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EASTICA를 넘어서

: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한 기록관리 민주화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은 첫째, 각국 내부의 기록관리 민주화 과정과 결합되어야 한다. 한국의 기록관리 체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곧 국가 아카이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물론이고 지방 아카이브의 조직, 기록관의 실제화,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확산,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 기록학 연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앙집권화 된 기록관리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미성숙하여 견제와 감시자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東北工程’ 과정에 나타난 역사기록의 접근 제한 등은 중국이 기록공개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국립공문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어 일본제국주의 시기에 생산된 기록의 공개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민주적인 책임’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은 각국의 기록관리 체제가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 민주화는 각국의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곡된 과거와 과거를 왜곡하는 현재의 모순된 상황은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²⁵⁾ 또한 과거사 기록의 공개 등 민주적 기록관리 체제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는 기록관리라는 제한된 범위 내의 실무적 교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25) 백지운, 앞의 글, 349쪽.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는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기록과 아카이브 설립 문제를 토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²⁶⁾ 그 대상이 동아시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 최하층에 편입된 소수자들의 노동현실·인권·차별 문제 등을 다루지 않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아카이브 나아가 동아시아의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곧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아카이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일국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아카이브 발전이 기록공동체 형성 주체들 사이의 긴밀한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국가 아카이브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같은 문화권 내에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서구에 비해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카이브로 표상되는 기록 문화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기록문화는 각국이 처한 조건에 따라 상이한 발전 경로를 거쳐 왔다.

전지구화 시대에 미래의 동아시아 아카이브는 국제적인 기록관리 표준과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유럽의 유로피아나(Europeana)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지역 문화권 내의 아카이브·박물관·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 나라의 기록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디지털시대 기록문화 유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표준의 개발과 연대는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록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6) 이주노동자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유유희, 「이주노동자 기록의 생산·관리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년 참조.

요컨대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아카이브로의 외연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는 EASTICA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EASTICA는 그동안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국가 아카이브 차원의 의례적 교류에 머물렀으며, 협력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매개로 한 기록관리 체제 개혁이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면, 기록을 무기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나오며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6년 ICA 총회의 한국 개최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0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현재 조건에서는 국가 아카이브 차원의 이벤트로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록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은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조직될 수는 없을까? 그 논의를 기록관리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독재와 폭력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평화와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문제 등이 논의되는 장으로 전환될 수는 없을까?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야를 동아시아로 확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프로세스가 기록공동체의 과제와 맞닿아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일국적 차원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의 역사·여성·인권·노동·평화 등 다양한 가치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

제들은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이는 곧 기록공동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은 곧 기록관리를 민주화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나아가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가치들이 공동체 내로 피드백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때 전통과는 다른 21세기 동아시아의 민주적 기록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Community in the East Asia

Kwak, Kun-Hong

It is well known that records management is closely related to democracy, and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in Korea did also aim to reach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Likewise, the first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community in the East Asia is to help promote democracy and form a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region through records management.

Secondly, the distorted view of history easily found in the history textbooks of each countries should be corrected for the 21st East Asia in peace. Records and memories in the past are main components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A great many records to solve the disputes over history still remains inaccessible at large in the archives of the East Asia. A coming archival community will endeavor to disclose and share the historical records for harmonious awareness of history.

Cooperation and solidarity within archival community in the East Asia featur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governance and more records disclosure can be a brand-new start for peace and 'better' democracy in his region.

Key words : Archival Community in the East Asia, East Asia, EASTICA